

유고연방

◆ 유고연방, 세르비아-몬테네그로 국가연합으로 개편

유고슬라비아 연방정부 및 동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세르비아 공화국과 몬테네그로 공화국 정부는 지난 3월 14일, 현 연방체제의 유고슬라비아를 '세르비아-몬테네그로'라는 이름의 국가연합으로 대체하는 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동 협정은 4월 9일 세르비아 공화국과 몬테네그로 공화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 유고슬라비아 연방의회에 회부되었다.

이로써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등 6개 자치국으로 구성된 연방 왕국으로 탄생,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화되어 연방 공화국으로 이어져온 유고슬라비아는 동 협정의 비준 및 발효와 더불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는 티토의 사망과 동구권 붕괴 이후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의 분립독립,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코소보 자치주에서의 내전 등 숱한 분란을 겪으면서 실질적으로 해체되었으며, 동 협정과 더불어 공식적으로 완전한 소멸을 맞게 되었다.

코슈투니차 유고슬라비아 연방 대통령, 진지치 세르비아 총리, 듀카노비치 몬테네그로 대통령 등이 조인한 동 협정은 EU의 솔라나 외교·대외정책 대표의 중재로

성사되었다. 무역과 원조의 상당 부분을 EU에 의존하고 있는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는 EU의 협상 주도에 적극 협조할 수밖에 없었으며, EU는 신설될 세르비아-몬테네그로 국가연합과도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협정의 주요 내용

신설되는 국가연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국가연합 정부가 과거의 연방정부에 비해 제한된 권한을 갖는 것이다. 동 협정에 의하면 각 공화국은 대통령, 의회, 내각 및 법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가연합도 대통령, 의회, 내각 및 법원을 갖게 된다. 국가연합 의회는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대표가 각각 일정한 비율로 구성되는 단원제(單院制) 형태이며, 국가연합 대통령은 국가연합 의회에서 선출된다. 아울러 각 공화국은 이전 연방체제에서와 같이 내무·재무·사법 및 교통운송 등의 분야를 관할하지만, 이번 협정은 공식적으로 각 공화국이 이 분야를 관할토록 명시하였다.

다만, 외교 및 국방은 연방체제와 마찬가지로 계속 국가연합 정부가 관장하게 된다. 국가연합 및 두 공화국 대통령들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최고국방위원회가 국

방을 총괄하는 단일 국방체제를 유지한다. 국가연합은 UN, 유럽 회의(Council of Europe) 등 각종 국제기구에 대표를 파견하되, 각 공화국이 번갈아 대표를 내게 된다.

느슨한 연합체제와 더불어 경제적으로 두 공화국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연합의 또 다른 특징이다. 세르비아는 기존 유고슬라비아 디나르貨를, 몬테네그로는 새로이 유로貨를 사용하고, 현재의 독자적인 조세 및 관세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 경제면에서는 두 공화국은 실질적으로 별개의 국가처럼 되어 정치면에서보다 더욱 느슨한 관계로 남게 된다.

한편, 두 공화국간의 무역·통관 등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차이는 EU의 기준에 따라 상호 조정해간다는 항목이 눈길을 끄는데, 이는 신생 국가연합을 EU 체제에 편입시켜 발칸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를 도모하려는 EU의 입장과 장기적으로 EU 가입을 바라는 국가연합의 입장이 서로 일치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동 협정의 내용에는 두 공화국이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 뒤에 별개의 국가로 분리·독립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국가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협정 지속 여부 아직 불투명

이번 협정으로 탄생할 새로운 국가연합 체제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번 협정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는 각 당사자들의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코슈투니차 대통령은 새 체제가 연방정부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중앙집권적 형태가 되기를 희망한 반면, 세르비아의 진지치 총리는 몬테네그로와의 명확한 관계 정립과 연방정부의 권한 축소를 원했다. 한편, 듀카노비치 대통령은 약소국인 몬테네그로가 세르비아와는 단순히 CIS 처럼 느슨한 형태의 국가간 연합을 유지할 뿐, 국제적 인정을 받는 실질적인 독립국이 되기를 희망했다.

따라서 이번 협정은 관련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킬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타협안이며, 게다가 협정 발효 3년 후 국민투표를 통해 국가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는 3년 뒤에는 결국 완전한 별개의 국가로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민족이 혼재하고 있는 발칸 지역은 아직도 민족간 갈등과 국경변경에 대한 분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지역이다.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가 완전히 분리된 국가로 다시 출범할 경우, 이는 세르비아의 보이보디나 자치주에 거주하는 헝가리계, 코소보와 마케도니아의 알바니아계 등 소수민족을 자극하여 분리독립을 위한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유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미국과 EU는 이 지역에서의 어떠한 국경변경 시도도 강력히 반대해왔다. 따라서 내심으로 분리를 원하는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도 미국과 EU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분리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吳 昊 駟】